

2016년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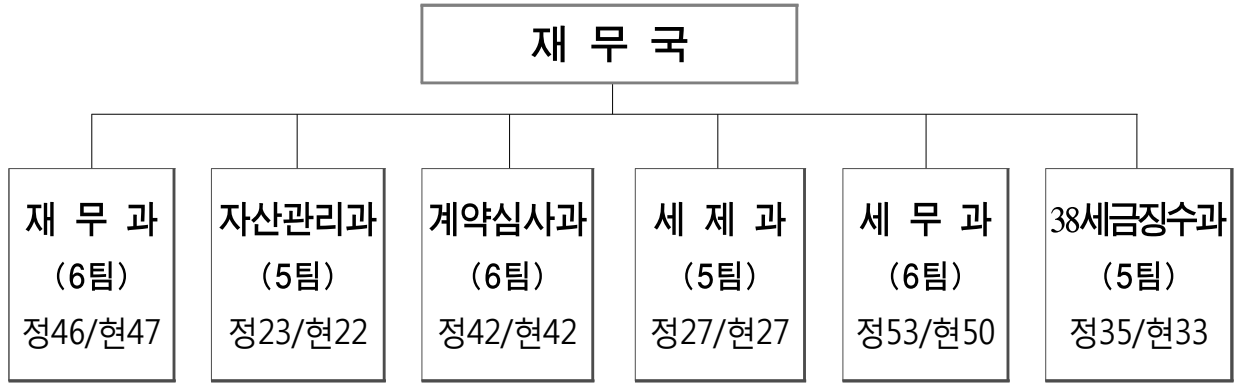
2016. 11.

재 무 국

I. 일반현황

조직 · 인력

6과 33팀 226명/221명 (정/현원)



기능

과 별	주 요 업 무
재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제도 개선 및 희망기업 구매 확대 ○ 자금관리, 세입·세출 결산, 지출·계약 등
자 산 관 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재산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계 약 심 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용역·물품구매·민간위탁 원가 심사 및 조정 ○ 발주부서 원가분석능력 제고방안 강구 등
세 제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
세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 세입 추계 및 총괄 조정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지도 감독 등
38세금징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과년도 체납시세 관리 및 징수 총괄 ○ 자치구 체납시세 관리 및 지도감독

세입·세출 예산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5년	증 감	
			금 액	비 율
계	14,824,044	14,412,775	411,269	2.9
시 세	14,125,773	13,787,530	338,243	2.5
세 외 수 입	698,271	625,245	73,026	11.7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5년	증 감	
			금 액	비 율
계	2,055,783	2,330,660	△274,877	△11.8
인 력 운 영 비 (통 합 편 성)	648,431	982,629	△334,198	△34.0
기 본 경 비	1,774	2,405	△631	△26.2
사 업 비	87,354	80,654	6,700	8.3
회 계 운 영 개 선	1,944	1,298	646	49.8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67,767	61,376	6,391	10.4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108	205	△97	△47.3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10	10	-	-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110	118	△8	△6.8
시 세 입 목 표 달 성	9,173	9,614	△441	△4.6
조 세 정 의 실 현	8,241	8,032	209	2.6
타 기 관 지 원	1,318,224	1,264,972	53,252	4.2
자 치 구 교 부 금	1,318,224	1,263,464	54,760	4.3
출 연 금	0	1,508	△1,508	△100.0

재 산 현 황 (市)

(2015회계연도 결산 기준)

구 분	토 지		건 물	
	필 지	면 적(천㎡)	동 수	면 적(천㎡)
계	59,638	104,605 (100.0%)	55,252	9,414 (100.0%)
행정재산	57,323	103,405 (98.9%)	2,525	4,654 (49.4%)
일반재산	2,315	1,200 (1.1%)	52,727	4,760 (50.6%)

II. 정책목표 및 방향

목표

시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재정관리 구현

**市 세입의
안정적 확보**

1. 체계적 세수관리 및 총력 징수로 세입목표 달성
2. 합리적 세정 운영을 통한 재정 확충
3. 효과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전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세정 구현**

1. 납세자 권익보호 기반 강화
2. 서민친화적 세정 실천
3. 전자납부 확대를 통한 납세편의 향상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

1. 조달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계약제도 운영
2. 시민편의를 위한 계약정보 공개 확대
3. 원가심사 내실화로 예산절감 및 신뢰성 제고

**시유재산의
공공성과 수익성 강화**

1. 행정수요 대비 시유재산 최적 활용
2. 시유재산의 수익성 강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대

정책
과제

실천
과제

Ⅲ. 주요업무 추진실적

1. 市 세입의 안정적 확보

2.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세정 구현

3.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

4. 시유재산의 공공성과 수익성 강화

1. 市 세입의 안정적 확보

1-1. 체계적 세수관리 및 총력 징수로 세입목표 달성

1-2. 합리적 세정 운영을 통한 재정 확충

1-3. 효과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전개

- ◆ 안정적 세입 확보를 통해 민선6기 핵심과제 실현 기반 조성
- ◆ 세입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세입분석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사업개요

- 국내·외 세입환경 변화 등에 따른 징수대책 추진으로 세입목표 초과달성
- 세원누락 방지 및 징수율 저조 세목 집중 관리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 추진실적 : 징수액('16.9 현재) **13조 7,398억원** (예산대비 87.6% 진도율)

(단위 : 억원, %)

구 분	'16년 예산액 (A)	징수실적(9월 현재)		전년동기 징수액 (C)	전년대비	
		징수액 (B)	진도율 (B/A)		금액 (D=B-C)	비율 (D/C)
계	156,912	137,398	87.6	127,289	10,109	7.9
시 세	141,258	131,317	93.0	122,171	9,146	7.5
세 외 수 입 (市 일반회계)	15,654	6,081	38.8	5,118	963	18.8

- 국내·외 세입환경 변화, 징수실적 분석·점검 등 모니터링 강화
 - 가계부채 증가, 청탁금지법 시행,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 등 경제상황 불확실
- 시세 징수율 향상을 위한 단계별 징수대책 연중 추진
 - 시세 대책회의(3월), 세외수입 특별대책회의(4월, 11월) 등 개최
-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표 착오 확인, 비과세·감면 자료의 관리 강화
 - 신축건물 과표 착오, 비과세·감면 자료 정기 및 수시 일제조사 등
-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징수역량 강화 및 전산시스템 개선
 - 시·구 집중교육, 체납징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추가 개발 등

□ 향후계획

- 세입여건 모니터링, 징수실적 분석 등을 통해 징수율 집중 관리

- ◆ 탈루·누락 세원 적극 발굴로 성실납세 유도 및 市 재정 확충
- ◆ 지방세 주요소송 최종 승소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 및 세입 확보

① 탈루·누락 세원 발굴

□ 사업개요

-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은 세목 및 과세물건 위주의 세무조사 실시
-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철저를 통한 과세누락 방지

□ 추진실적 : 574억원 발굴 ('16.9 현재)

(단위 : 백만원)

목 표	실 적					진도율
	합 계	감면부적정	중과착오	과세누락	과표착오등	
70,000	57,380	4,344	4,518	42,956	5,562	82.0%

- 정기 세무조사 대상 확대 및 탈루가능성 높은 분야 기획조사
 - 1천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 신·증축 자료 정기 조사
 - 대도시내 본점 신·증축 및 대도시내로 사실상 본·지점 전입법인 일제조사
- 기업부설연구소, 종교용, 교육용 등 유형별 감면 적정성 등 사후 관리
 - 감면요건 충족 여부, 고유 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 현장조사
- 정비사업시행자의 국·공유지 유상(교환)취득분 기획조사
 - 정비사업자가 기존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취득시 취득세 누락여부

※ 국·공유지 취득 세무조사('15.4~'16.9)

- 취득세 546억원 추징, 행정소송(52억원, '16.9), 심판청구(30억원, '16.2)

○ 납세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세무조사 절차 개선

-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16.3), 세무조사 진행사항 공개(58건, '16.9 기준)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6.10.25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시세 세원발굴 지원	219,000	71,172	71,172	32.5	32.5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42,367	30,750	30,750	72.6	72.6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세원 발굴 평가	900,000	900,000	900,000	100.0	100.0

향후계획

- 탈루가능성 높은 분야 집중 기획조사 및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철저

② 리스차입제 취득세부과 행정소송 추진

소송개요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총 11건 1,420억원 진행 중
 - 11개 리스사가 4개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 제기('14.9) ※ 우리시 보조참가
 - 군청소재지 등 허위사업장 등록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에 대해 부과취소 청구
- '16.10월 현재 대법원(1건) 및 서울고등법원(10건) 진행중
 - 1심 선고결과 우리시 일부승소 6건, 패소 5건('15.8~'16.5)
 - 2심 선고결과 우리시 일부승소 1건('16.9), 진행중 10건
 - ▶ 진행중인 10건 중 7건은 변론기일 추후 지정, 3건은 변론 미진행이나 2심 우리시 일부승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시까지 기일 추정될 것으로 예상됨

향후계획

- 대법원 계류중인 사건 선고시, 나머지 사건도 이에 따라 판결 예정
- 시·자치구·조세전문 법률 대리인 상시 공조, 소송전략회의 등 총력 대응

- ◆ 체납규모의 지속적 증가를 차단하기 위한 체납 특별관리대책 추진
- ◆ 내실 있고 지속적인 체납관리로 市 재정 확충 및 조세정의 구현

□ 체납 현황

- 적극적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체납 1조 3천억원 상회
 - 징수액 : ('11) 1,579억원 → ('13) 1,880억원 → ('15) 1,797억원
 - 체납액 : ('11) 8,658억원 → ('13) 1조1,871억원 → ('15) 1조3,025억원
- 징수율이 낮은 지방소득세의 체납액 누증으로 징수여건 날로 악화
 - 지방소득세 체납 비중 : ('11) 72.3% → ('13) 74.9% → ('15) 76.7%

□ 추진실적 : 징수액('16.9 현재) **1,982억원** (목표 2,252억원 대비 진도율 88.0%)

- 선제적 체납관리 및 시·자치구 간 동반자적 징수 체계 구축
 - 과세단계부터 체납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송달 및 조기 채권확보 철저
 - 시·구 합동징수를 위한 TF팀 공조, 가택수색 지원, 우수사례·노하우 등 공유
- 강력하고 획기적인 신규 징수기법 도입 및 실행
 - 체납자 명의 주택 임차보증금 전수조사를 통한 생활실태 파악 및 채권 압류
 - ▶ 1억원 미만(소액)은 분납 유도, 1억원 이상은 납부 안내 후 압류 조치
 - 전자상거래 매출채권(PG), 실거주지 등 추적을 통한 채권 확보, 소송자료 조사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재산은닉 등 범칙혐의자 조사 등 확대 실시
 - 특별관리 고액 체납자(고가주택 거주자, 사치성 해외 여행자, 유명인사) 밀착 관리
 -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상향 : 3천만원 → 1억원 ('16.1.1 지방세기본법 개정 시행)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6.10.25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513,560	1,655,402	1,519,458	65.9	60.5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5,449,291	3,333,604	3,333,604	61.2	61.2
체납징수기법 공유 사·구 합동워크숍	13,200	13,200	13,200	100.0	100.0
고액체납시세 징수 강화	265,300	216,568	214,925	81.6	81.0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체납징수 평가	1,500,000	1,500,000	1,500,000	100.0	100.0

향후계획

- '16년도 하반기 시세 체납징수 중점 추진 : '16.11~12
- 신규 징수기법(PG채권, 임차보증금, 실거주지, 소송사건 등 조사) 지속 추진
- 체납처분, 동산압류, 검찰고발, 행정제재 등 징수활동 연중 실시

세무 분야 예산집행현황(총괄)

(단위 : 천원, %, '16.10.25 기준)

구 분	사업내용 · 추진실적	'16년 예산현액	집행현황		결산전망
			금액	집행률	
합 계		1,335,759,741	655,142,318	49.0	1,335,332,576
세 제 과		1,017,003,304	350,113,893	34.4	1,016,992,421
재정보전금	-25개 자치구 대상, 재정보전금 교부를 통한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 -공동재산세전출금 9,677억원 교부완료 (잔여 152억원 12월 교부 예정) -면허세보전금 255억원 교부완료 (잔여 85억원 12월교부예정)	1,016,882,930	350,019,712	34.4	1,016,882,930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연구과제 발표·토론을 통한 지방세제 개선사항 도출 및 법령개정안 마련 -세제개선 공동연수 개최(4월)	10,374	10,144	97.8	10,144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등 심의·의결 -위원회 구성 : 판사 등 25명 -'16년 실적 : 총 17회 225건 심의	110,000	84,037	76.4	99,347
세 무 과		310,515,086	299,809,652	96.6	310,169,204
시세징수교부금	-각 자치구에서 징수한 시세 징수액의 3%를 지급하는 법정경비	301,341,600	291,769,926	96.8	301,341,600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조합(한국 화해납세조합 등 18개 조합)에 대한 법정 징수교부금 지급 (납입세액의 5%)	317,300	309,644	97.6	317,300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고지서 통합인쇄 및 봉투제작	830,687	643,057	77.4	723,084
상시세금 납부 체제 구축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 관련 수수료 지급 및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서울시분담금 지급 -납세편의서비스 : 카드이용납부, 문자안내, 편의점 납부 등	132,682	119,485	90.1	130,685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자치구 교육 교재 발간비, 과징지도 활동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입 확보 유공 시상금 등	190,260	166,620	87.6	181,860
모범납세자 지원	-ETAX 전자납부 마일리지 지급 -2016년도 모범 및 유공납세자 선정 위원회 운영	421,512	337,521	80.1	421,512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세무공무원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 (총 2회, 6월/11월))	30,000	17,000	56.7	30,000
시세 세원발굴 지원	-민간인 및 공무원의 탈루·누락세원 발굴관련 포상금 집행 -분기별 자치구 시세 세원발굴 포상금 재배정	219,000	71,172	32.5	102,513

구 분	사업내용·추진실적	'16년 예산현액	집행현황		결산전망
			금액	집행률	
시 세입증대 자치구협력 및 지원사업	-자치구에 위임되어 징수되고 있는 시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누락세원 발굴, 체납세입 징수실적 등을 최대화하여 시 세입을 증대 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 -2015회계연도 시세입 종합평가 및 체납징수평가 자치구 지원사업비 교부(6월)	5,000,000	5,000,000	100.0	5,000,000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세무종합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기능개선 -응용프로그램 및 SW 유지보수 -지방세 부과·징수처리 및 운영 지원 -세무종합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1,271,589	867,533	68.2	1,251,200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및 상용 SW, DB 관리	42,367	30,750	72.6	42,050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상용 SW, DB 관리	718,089	476,944	66.4	627,400
38세금징수과		8,241,351	5,218,774	63.3	8,170,951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서울특별시세입징수공적심사 위원회 운영 : 연 6회 개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12월 집행 예정 -체납시세 징수에 따른 시·자치구 징수공무원 포상금 집행	2,513,560	1,655,402	65.9	2,443,160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에 따른 대행사업비 분기별 지급 -'16년 번호판 영치실적 : 108,951대 (영치 54,009대, 예고 54,942대)	5,449,291	3,333,604	61.2	5,449,291
체납징수기법 공유 사·구 합동워크숍	-체납징수 협력체계 구축·강화와 징수공무원의 사기 고취를 위한 합동워크숍 개최 : 연2회 (5월,10월)	13,200	13,200	100.0	13,200
고액체납시세 징수 강화	-고액체납징수 및 채권확보 등을 위한 수수료 지급 -고액체납자 추적 조사를 위한 우편료 및 차량운행비 등 지급	265,300	216,568	81.6	265,300

2.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세정 구현

2-1. 납세자 권익보호 기반 강화

2-2. 서민친화적 세정 실천

2-3. 전자납부 확대를 통한 납세편의 향상

2-1

납세자 권익보호 기반 강화

- ◆ 납세자 공감 및 성실신고자의 불이익 방지에 의한 세정신뢰도 향상
- ◆ 모범납세자 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성실납부자 적극 우대

□ 사업개요

- 납세자 성실 신고납부 환경 조성 및 과실 없는 행위에 대한 책임면제
- 성실 납세자 우대를 위해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조정

□ 추진실적

- 신축건물 취득세 성실신고 사전점검표 개발, 납세자에게 제공('16.3 시행)
 - 복잡한 과표 항목에 의한 신고누락, 가산세 부담 등 완화(1,223건)



- 지속적인 신축비용 항목 모니터링 등으로 사전점검표 현행화
-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 운영지침」 마련('16.10 시행)
 - 과세권자 착오에 의한 가산세 과세부분 축소, 세정신뢰도 향상
 - 법률자문 등 실시, 개선 타당성 확보 및 운영상의 문제점 사전 보완 등
-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제도 개선 추진('16.8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변경(안) : 3년간 연간 3건이상 → 10년간 연간 2건이상
 - 전자납세자 마일리지 차등 적립, 제3자 양도 등 사용방법 확대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6.10.25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모범납세자 지원	421,512	337,521	337,521	80.1	80.1

□ 향후계획

- 납세자 스스로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공내용 지속적 현행화
-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회 의결 후 시행 : '16.12

- ◆ 조세약자 등 시민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편의 지원
- ◆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협동조합 등 지원을 위해 세제의 합리적 개편 추진
- ◆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통해 경제민주화 실천

① '마을세무사' 운영

□ 사업개요

- 무료세무상담서비스 '마을세무사' 전 자치구 확대·운영('16.1)
 - 구 성 : 25개구 208개동 213명('16)
 - 역할 : 세무상담, 불복청구 지원, 市 위탁기관 상담 및 지문 등
 - ▶ 서울시, 전국 최초 도입('15.1) / 행정자치부, 전국으로 확대 시행('16.6)



□ 추진실적 ※ 비예산사업

○ 상시 맞춤형 세무상담서비스 실시 : 2,811건 ('16.9 기준)

합계	상담종류(건)			상담방법(건)			
	국세	지방세	국·지방세	전화	방문	메일	팩스
2,811	2,518	102	191	2,480	296	34	1

- ▶ '15년 상담실적 : 2,168건
-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
 -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정기 개최(3회),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등
-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마을세무사 소통Day' 개최('16.6.20)
 - 전문가 특강, 우수활동 세무사 표창, 사례발표 및 토론 등

□ 향후계획

-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 추진 : '16.10~
 - 마을세무사의 주요역할, 위촉·해촉, 수당·표창 등 운영 관련사항 규정
- 우수활동 마을세무사 표창 : '16.12

② 조세약자 지원

□ 사업개요

- 사회적협동조합의 잦은 출자금 변경 및 비영리성 고려, 세제 감면지원
- 세무전공 대학생을 활용, 조세약자의 실질적 세무고충 해소

□ 추진실적 ※ 비예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 지방세 경감 추진

- 등록면허세의 최저한세를 기타 법인등기 세율(40,200원/건)로 개정 추진
 - ▶ 등록면허세 세율 : 사회적협동조합 2/1,000, 최저한세 112,500원
 - ▶ 산출세액 56,250원(출자금 28,125천원인 경우) 이더라도 최저한세인 112,500원 납부
- ※ 자치구 구세감면 조례 개정 추진 중 (완료 1개구, 하반기 개정 예정 22개구)
- 법인지방소득세 경감 추진('16.하반기)
 - 시세감면조례 제12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에 특례조항 신설

② 세무인턴 제도 시행

- 참여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16.2 MOU 체결)
 - ▶ 서울시, 서울시립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 회계프로그램 교육 추가, 참여기관 확대(강남대), 세무인턴 확대('16.하반기)
 - ▶ 상반기(세무인턴 10명, 멘토세무사 5명), 하반기(세무인턴 32명, 멘토세무사 15명)
- 세무인턴 시행('16.3) 이후 40개 기업의 고충 해결 진행 중

□ 향후계획

-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16.11~
- 세무인턴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관 등 확대 추진 : '16.11~

③ 체납자 경제적 재기 지원

□ 사업개요

- 영세 사업자의 세금체납에 의한 신용불량 및 관허사업 제한 해제 및 보류
- 소액 예금(150만원 미만) 및 장기 압류 미운행 차량 압류해제로 시민부담 해소

□ 추진실적 ※ 비예산사업

-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회생 지원계획 수립('16.4)
- 시·자치구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상담창구 운영('16.4~)
- 분납이행서 등을 통해 납부의지·회생가능성을 고려, 제한 해제 추진('16.4~)

(단위 : 명, 백만원, '16.9월말 기준)

구분	합계		신용불량 해제		관허사업제한		체납처분 유예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지원현황	1,411	39,467	1,386	38,735	20	120	5	612

- 소액예금, 장기압류 미운행 차량 등 압류해제 추진('16.4~)
 - 150만원 미만의 금융재산, 11년 초과 승용·13년 초과 화물 차량 등

(단위 : 명, 건, 백만원, '16.9월말 기준)

구분	합계			예금·보험 등			차량 등		
	인원	압류	체납액	인원	압류	체납액	인원	압류	체납액
지원현황	39,734	77,989	260,311	10,948	13,935	132,459	28,786	64,054	127,852

- 개인회생절차 중인 체납자의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금 감면 추진
 - 회생인가·변제계획 제출시 가산금 유예토록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개정 시행('16.6)

□ 향후계획

- 생계형에서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까지 확대하여 지속 지원 추진

- ◆ 전자적인 납부체계 지속 확대에 의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
- ◆ 다양한 세금 신고 및 납부방법 도입 등 납세 편의시책 확대

□ 사업개요

- 맞벌이 부부 증가, 장기여행 등에 따른 고지서 미송달, 전자납부 확대 추진
- 인터넷, 스마트폰, ARS 등 세금 신고 및 납부방법 다양화

□ 추진실적 : 전자납부율 46.7% ('16.9 기준)

합 계 (A)	방문납부 (B)	전자납부 (C)	이용율 (C/A)
13,640천건	7,271천건	6,369천건	46.7%

* 전자납부 : 인터넷·스마트폰 간편결제·ARS 등 (가상계좌는 실적에서 제외)

① 무방문, 무고지서 등 온라인 세금납부 체계 구축

- ETAX,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가상계좌, 자동이체, ARS 등
-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받아 납부하는 「전자납세제도」 적극 확대
 - 전자납세자 마일리지 차등 지급 추진, 마일리지 등 포인트 통합 사용 추진

② 스마트폰 기반 즉시 결제 가능한 간편 세금납부 체계 구축

- 간편결제 세금납부 민간서비스 확대('16.7)
- 민·관 협력을 통한 「모바일 세금 고지서」 발송 시스템 구축('16.8)
 - ▶ MPOST(주)LG-CNS) · T스마트 청구서(주)SK) 구축 완료('16.9)
- 시간·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모바일 지방세 신고 시스템」 구축
 - 입력사항이 적은 '자동차세 연납분' 부터 추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6.10.25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상시세금 납부 체제 구축	132,682	119,485	119,485	90.1	90.1

□ 향후계획

- 간편결제 추가 협의 중, 모바일 지방세 신고 시행('17.1, 자동차세 연납분)

3.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

3-1. 조달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계약제도 운영

3-2. 시민편의를 위한 계약정보 공개 확대

3-3. 원가심사 내실화로 예산절감 및 신뢰성 제고

- ◆ 누구나 공감하는 경쟁계약 제도 확산 및 잘못된 관행의 재발 방지
- ◆ 용역근로자 임금 지급방법 개선으로 임금체불 해소 및 사업능률 극대화

사업개요

① 「수의계약」 제도 개선('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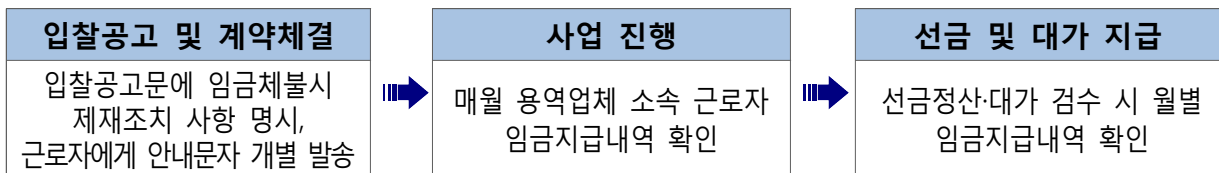
- 수의계약 가능범위 하향조정 : (물품) 2천만원 이하 → 1천5백만원 이하
- 동일업체와 반복계약 금지 : 별도 규정 없음 → 실·본부·국·기관별 연 5회

②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제도 개선('16.1)

- 평가점수 최저점(60점) 도입, 공무원 참여인원 제한(1/3 이내)
- 제안서 평가사유서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

③ 용역근로자 대가지급 체계 개선('16.1)

- 사업 단계별 발주·계약부서 모니터링을 통해 임금 체불 근절 추진



추진실적 ※ 비예산사업

- 물품 수의계약 비율 대폭 감소, 공개경쟁 확대
 - 전년 동기 대비 건수 △15.3%(980건→830건), 금액 △41.7%(211억원→123억원)
 - 연간 5회 이상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감소(3년 평균 17개 기관 → 1개 기관)
- 제안서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제안서평가위원회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한 이행력 담보('16.4)
- 용역근로자 임금 적기 지급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에 기여(863건)

향후계획

- 계약 이행실태 모니터링 지속 실시, 부적정 사례 개선 조치 등

- ◆ 분산된 계약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해 정보 이용에 대한 편리성·활용도 제고
- ◆ 시민 맞춤형 공공조달 백서를 제작·공개하여 계약 과정의 투명성 강화

□ 사업개요

① 계약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구축·운영

- 행자부, 조달청,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에 분산된 계약정보 통합
- 자치구별 희망기업의 위치·제품 정보 제공
- 부실업체(안전사고, 부실벌점 등) 이력관리 추진

② 공공조달 정책의 내용 및 성과를 정리한 백서 제작 추진

- 서울시가 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결과 공유

□ 추진실적

○ 서울시 모든 계약정보 통합·공개('16.2)

- 발주계획, 사업진행과정, 대금지급내역 등 쏘 과정 대시민공개
- 희망기업(159,147개)의 정보를 지도에 표현 공개하여 구매 활성화 유도
- 조달청 부정당업자 및 국토부 행정처분 이력(8,454건, 1,283개 업체) 관리를 통해 서울시 계약의 품질 제고

○ 「공공조달 혁신 백서」 발간으로 시민의 정책적 공감대 제고('16.8)

- 그간의 계약 제도개선 사항, 공공조달 개선 효과, 유형별 계약통계 등 제공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6.10.25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계약정보관리 및 공공구매 업무추진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98,455	50,602	11,490	51.4	11.7
공공조달 백서 제작	21,714	20,735	20,735	95.5	95.5

□ 향후계획

-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 보강

- ◆ 합리적인 원가심사와 설계경제성 심사로 비용절감 및 공사품질 향상
- ◆ 전문가·발주부서와의 협업 강화를 통해 심사의 신뢰성 확보

① 계약원가 심사

□ 사업개요

- 공사·용역·물품구매 발주에 앞서 발주부서가 산정한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
- 시장가격 조사, 품셈의 적정반영 여부 및 설계 자료 검토, 현장 확인 등

□ 추진실적

- 계약심사 절감실적 ('16년 절감률 목표 6.5%)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절감액	절감률
2,600건	1조 7,366억원	1,265억원	7.3%

-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가심사로 심사의 신뢰성 향상

- 민·관 협의체 '원가분석자문회의' 운영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
- 현장실사를 강화하여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
- 심사조정내역을 발주부서에 사전 설명, 원가심사 내역 공개로 투명성 강화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6.10.25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계약심사 업무추진	75,900	43,976	43,976	57.9	57.9

□ 향후계획

- 원가분석자문회의 운영, 현장실사, 심사조정내역 사전설명 등 지속 추진

※ **서울형 품셈 개발** (정부품셈에 없는 공정이나, 불합리한 공사원가 개선을 위한 기준 마련)

- 금년목표 11건 중 4건 개발 완료, 7건 연내 개발 추진

- ▶ 완료 공정 : (건축) 외장벽 바탕철물 설치 품, (조경) 산책로 데크 하부철물 설치 품, (전기) LED조명등 설치 품, (기계) 분수노즐 설치 품

② 설계경제성 심사

□ 사업개요

-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기능 확보를 위해 설계에 대한 경제성, 현장 적용 타당성 등 검토
 - 심사대상 : (기 관) 분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사비 재배정, 국사비 보조사업) (공사비)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 심사시기 : 건설공사 설계 공정률 80% 전·후
- 심사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민간전문가와의 협업 등을 통해 심사 수준 제고

□ 추진실적

- 대형공사의 안전성 제고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경제성 심사대상 확대('16.1)
 - 공사비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으로 심사대상 확대
- '16년 중 10건 심사하여 102억원의 예산 절감 (5건 진행 중)
 - 아이디어 채택 433건, 반영률 86%로 공사의 품질 제고
 - ▶ 원가절감(53건), 기능개선(193건), 성능 및 안전성 확보(92건) 등

※ 공사비 100억원 이상 심사실적 : 3건, 61억원 절감

-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특화공간 조성사업(사업비:214억원, 절감액:8억원)
- 서남물재생센터 3차 처리시설 설치사업(사업비:827억원, 절감액:45억원)
-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사업비 : 379억원, 절감액: 8억원)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6.10.25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	31,688	22,418	22,418	70.7	70.7

□ 향후계획

- 각 분야 전문가, 설계사 등이 포함된 워크숍 등을 통해 심사 지속 추진

지출 · 계약 · 결산 분야 예산집행현황(총괄)

(단위 : 천원, % , '16.10.25 기준)

구 분	사업내용 · 추진실적	'16년 예산현액	집행현황		결산전망
			금액	집행률	
합 계		650,482,208	507,389,728	78.0	635,370,250
재 무 과		650,374,620	507,323,334	78.0	635,287,450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공통 행정물품 보급지원 및 반납 물품, 재활용 등 자재창고 운영 -노후물품 및 복합기, 프린터 구매 지원 등	1,476,630	1,062,195	71.9	1,449,578
2015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서울시 통합 결산서 작성(1~3월) -결산검사 수검(3~5월) -시민참여결산 실시(5~6월) -시의회 결산승인(6월) -알기쉬운 재무정보 제작(7월) -재정연감등 결산통계 작성(8~10월)	236,455	189,998	80.4	214,83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e호조 시스템 자치단체별 분담금 지급	30,241	30,241	100.0	30,241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부정당업자 제한 등 심의 -위원회 구성 : 변호사 등 13명 -'16년 실적 : 10회 개최, 82건 심의	20,520	14,800	72.1	19,800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나라장터 입찰공고 수수료 납부 ('16.10월말 현재 총 2,709건)	60,000	59,850	99.8	60,000
계약정보관리 및 공공구매 업무추진	-서울시 공공조달 백서 제작(8월) -계약마당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20,279	32,225	26.8	71,337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본청 및 사업소 일반회계 소속 인건비 통합편성(10,384명)	648,430,495	505,934,025	78.0	633,441,664
계약심사과		107,588	66,394	61.7	82,800
계약심사 업무추진	-계약(원가)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2,600건, 1조 7,366억원 심사 / 1,265억원 절감, 절감률 7.3%) -원가분석자문회의 실시 : 7회 (11~12월 10회 실시예정)	75,900	43,976	57.9	56,000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	-설계VE 특별교육과정 실시(7월) -설계VE담당 공동연수 실시(10월)	31,688	22,418	70.7	26,800

4. 시유재산의

공공성과 수익성 강화

4-1. 행정수요 대비 시유재산 최적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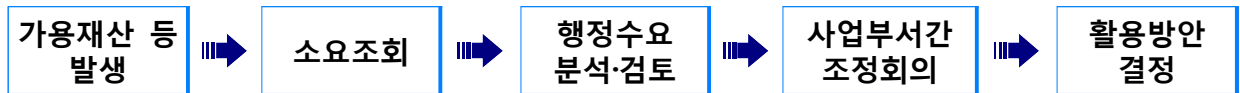
4-2. 시유재산의 수익성 강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대

- ◆ 시유재산 활용계획 수립체계 구축·개선으로 효율적 재산활용 도모
- ◆ 보수·보강 등 시유재산 활용가치 제고를 통한 행정수요 적기 대응

① 유휴·저활용 재산 최적 활용

□ 사업개요

- 가용 시유재산의 활용계획 수립절차 체계화를 통한 최적 활용방안 마련



□ 추진실적 ※ 비예산사업

- 유휴·저활용 재산 52건에 대한 최적 활용계획 수립('16.1~10)
 - 주요사례 : 舊한빛미디어갤러리(중구) →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 쉼터
 - 舊백산지구대(금천구) →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등
- 시유재산 소요조회 절차 개선계획 수립·시행('16.1, '16.7)
 - 재산 종류별/목적별 적정 소요조회 기간 적용으로 재산관리 효율화 도모

□ 향후계획

- 가용 시유재산 목록화 및 사업부서와 정보공유로 공간수요 적극 대응

② 노후·저활용 재산 공간재생

□ 사업개요

- 노후·저활용 재산의 안전성 확보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간재생 추진
 - 오래된 시유재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리모델링)

□ 추진실적

- 공간 개선 및 재산활용도 향상을 위한 보수·보강(리모델링) 지원(634백만원)
 - 舊명륜과출소(종로구) 환경미화원 휴게실 조성, 시청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 등
- 노후한 시유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실시(26백만원)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6.10.25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행정수요대비 공유재산 확보					
재산유지관리비	3,000,000	660,928	660,928	22.0	22.0

향후계획

- 사업추진 현황, 재산활용 실태 및 지원비용 적정 집행여부 등 점검(수시)

③ 사유지 집단화 사업

사업개요

- 여러 필지로 연접된 사유지를 집단화하여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 및 가치 현실화
 - 축척·지목 등이 달라 합병하지 못했던 사유지를 확정측량 후 단일 필지로 정리
 - 추진대상(4개소) : 영어마을 관악캠프, 어린이병원, 서울시립대, 상암근린공원

추진실적

- 영어마을 관악캠프(관악구), 어린이병원(서초구) 등 2개소 사업완료
 - 영어마을 관악캠프('16.9) : 14필지→1필지, 면적 62㎡ 증, 재산가액 565백만원 증
 - 어린이병원('16.10) : 8필지→1필지, 면적 106㎡ 증, 재산가액 336백만원 증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6.10.25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재산관리 수수료 등	400,000	57,107	57,107	14.3	14.3

향후계획

- 서울시립대학교(동대문구) 및 상암근린공원(마포구) 사업완료 : '16.11

-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의 차질없는 매각 재추진으로 市 재정수입 증대
- ◆ 매각대상 시유지 적극 매각 및 전략적 관리로 비용절감 및 세입증대 기여

□ 사업개요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 지구단위계획 용도에 맞게 분할 매각
 - － 時價를 반영한 공개매각 추진으로 공정성 및 수익성 확보
- 사업시행자와의 적극적 협의로 대규모 사업지구내 시유지 적기 매각
 - － 원지동 국립의료원 이전부지(보건복지부), 항동지구(서울주택도시공사)
- 보존부적합 소규모 시유지 적극 매각(임대) 추진 및 전략적 관리
 - － 행정목적에 활용되지 않는 보존부적합 시유지 공개매각 추진
 - － 매각(임대)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녹화조성 등 공공용도 활용 모색

□ 추진실적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16.9, 동남권사업단)
 - － 의료원 부지 획지 분할, 건물 지정용도 일부 변경으로 매수자의 사업성 제고
- 보존부적합 소규모 시유지 공개매각 및 공공용도 활용 추진
 - － 2016년 시유재산 공개매각 추진('16.3~10) : 6건, 42억원 낙찰
 - － 녹화·텃밭 조성 및 공동주택 부지 활용 전환('16.6) : 49건, 8천 m^2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6.10.25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감정평가수수료	983,116	108,065	108,065	11.0	11.0

□ 향후계획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감정평가·입찰공고·매매계약 체결 : '16.11~12
- 원지동 의료시설 부지·항동지구 매매계약 체결 : '16.12
- 2016년 제4차 공개매각 추진 : '16.12

재산관리 분야 예산집행현황(총괄)

(단위 : 천원, %, '16.10.25 기준)

구 분	사업내용 · 추진실적	'16년 예산현액	집행현황		결산전망
			금액	집행률	
합 계		81,573,983	73,573,244	90.2	81,569,133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체비지 유상이관비 상환 -동북권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대금 완납 및 소유권 이전완료 -노후·저활용 재산 정밀안전 진단 및 보수·보강 추진(6개소)	64,955,048	58,282,913	89.7	64,955,048
시유재산 관리위임	-자치구 위임 시유 일반재산 관리 및 처분	500,000	499,215	99.8	499,215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시유재산에 대한 공제(보험) 가입 -재산 교환·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 -시유지 집단화 사업추진(2개소) -재산업무 담당 공무원 연찬회 개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5회, 119건)	16,021,031	14,719,836	91.9	16,019,830
시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추진	97,904	71,280	72.8	95,040

IV. 세입·세출 예산 현황 및 전망

□ 세입예산

(단위 : 억원, '16.9월말 기준)

구 분	'16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산전망	비고
계	148,241	148,671	132,483	161,675	
시 세	141,258	147,427	131,317	158,983	
세 외 수 입	6,983	1,244	1,166	2,692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16.10.25 기준)

구 분	'16년 예산현액	집행현황		결산전망
		금액	집행률	
합 계	2,069,590,178	1,237,472,495	59.8	2,053,951,044
사업예산(계)	1,419,385,437	730,171,266	51.4	1,418,830,295
재 무 과	1,944,125	1,389,309	71.5	1,845,786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1,476,630	1,062,195	71.9	1,449,578
2015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36,455	189,998	80.4	214,83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30,241	30,241	100.0	30,241
계약심의회위원회 등 운영	20,520	14,800	72.1	19,800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60,000	59,850	99.8	60,000
계약정보관리 및 공공구매 업무추진	120,279	32,225	26.8	71,337
자 산 관 리 과	81,573,983	73,573,244	90.2	81,569,133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64,955,048	58,282,913	89.7	64,955,048
시유재산 관리위임	500,000	499,215	99.8	499,215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16,021,031	14,719,836	91.9	16,019,830
시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97,904	71,280	72.8	95,040
계 약 심 사 과	107,588	66,394	61.7	82,800
계약심사 업무추진	75,900	43,976	57.9	56,000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	31,688	22,418	70.7	26,800

구분	'16년 예산현액	집행현황		결산전망
		금액	집행률	
세제과	1,017,003,304	350,113,893	34.4	1,016,992,421
재정보전금	1,016,882,930	350,019,712	34.4	1,016,882,930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0,374	10,144	97.8	10,144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10,000	84,037	76.4	99,347
세무과	310,515,086	299,809,652	96.6	310,169,204
시세징수교부금	301,341,600	291,769,926	96.8	301,341,600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317,300	309,644	97.6	317,300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30,687	643,057	77.4	723,084
상시세금 납부 체제 구축	132,682	119,485	90.1	130,685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190,260	166,620	87.6	181,860
모범납세자 지원	421,512	337,521	80.1	421,512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30,000	17,000	56.7	30,000
시세 세원발굴 지원	219,000	71,172	32.5	102,513
시 세입증대 자치구협력 및 지원사업	5,000,000	5,000,000	100.0	5,000,000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271,589	867,533	68.2	1,251,200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42,367	30,750	72.6	42,050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718,089	476,944	66.4	627,400
38세금정수과	8,241,351	5,218,774	63.3	8,170,951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513,560	1,655,402	65.9	2,443,160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5,449,291	3,333,604	61.2	5,449,291
체납징수기법 공유 사·구 합동워크숍	13,200	13,200	100.0	13,200
고액체납시세 징수 강화	265,300	216,568	81.6	265,300
행정운영경비(계)	650,204,741	507,301,229	78.0	635,120,749
인력운영비(통합편성)	648,430,495	505,934,025	78.0	633,441,664
기본경비	1,774,246	1,367,204	77.1	1,679,085

V. 제270회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관련, 종합적으로 검토, 진행사항을 보고하기 바람 (자산관리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수자의 사업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16.9.8), 현 건축물 용도 중 사업성이 높은 오피스텔(50% 미만)도 건축 가능함을 공고문에 명시 하도록 하겠음 - 토지분할('16.10)→감정평가, 입찰공고('16.11)→낙찰자 결정, 계약체결('16.12)→1차 매각대금 수납('17.2)→2차 매각대금 수납('18.2)
<p>2. 남산 곤돌라 사업은 시의회의 공유 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은 후 미이행 하고 사업의 취소안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저해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 하기 바람 (자산관리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2월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관련 ICOMOS 패널회의 결과를 토대로 곤돌라사업의 재추진여부를 논의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 상정여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음 ○ 재산 취득·처분 및 취소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사업이 적기에 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재무국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할 계획임
<p>3. 매년 시세 징수율이 낮아지고 미수납 금액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미수납 세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8세금징수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징수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총력징수 체계로 체납 특별정리기간(상반기 5~6월, 하반기 11~12월)을 운영,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16년 체납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38세금징수과 내 고액시세 전담 TF를 구축·운영 중이며, 25개 자치구 영치의 날, 특별체납 정리의 날 등을 지정·운영하고 있음 ○ 한편, 고액체납 징수전담 인력 확충 등 조직, 예산, 인력, 제도적 측면에서 중장기적 징수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 사회적배려기업 우선구매제도의 경우 실질적으로 기업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람</p> <p>(재무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는 2012년부터 장애인, 여성, 신규채용 등 고용우수기업 및 노사상생,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점을 마련하여 이미 상당 부분 기업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계약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도 입찰시 장애인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가산점 확대 방안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행자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p>5. 사업예산의 집행률이 25%로 저조하므로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만들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대해서 수시보고 체계를 구축, 보고하기 바람</p> <p>(재무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실적이 부진하나, 연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도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시 사업별 예산편성 및 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음
<p>6. 체납 징수율이 50% 정도 밀돌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므로 포상금 지급규정, 체납징수요원간의 기능과 역할 조정, 특별교부금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p> <p>(38세금징수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대비 징수실적과 연계한 징수포상금 지급한도, 결손전담 직원 부과 건당 지급기준 한도액 등을 조정하는 등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하도록 하겠음 ○ '16.10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체납징수 개선방안 연구를 의뢰한 상태이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물을 반영한 체납징수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음 ○ 징수실적과 연계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지급 등에 관하여는 자치행정과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7.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장의 인사에 행정자치부의 영향이 미치고 있으므로 연구원장 선임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마련해 주기 바람</p> <p>(세제과)</p>	<p>○ 17개 광역 시·도 세정과장 협의체인 지방세정협의회에서 출연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원장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으며('16.10.18),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행자부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음</p>
<p>8.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 추진에 있어서 서울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연구의 비중을 늘리도록 하고, 연구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p> <p>(세제과)</p>	<p>○ 특정 지자체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적극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지방세 법령정보 시스템(OLTA)'에 연구현황 총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음</p>
<p>9. 자동차 공매를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 일부 대행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체 대행하는 개선방안 간에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이를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체납징수의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p> <p>(38세금징수과)</p>	<p>○ 공매 관련 기관 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 대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기관과 원만히 협의하여 협정을 체결, 공매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음</p>

VI.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42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42	33	9	-	-
	시정.처리요구사항	23	17	6	-	-
	건의사항	11	8	3	-	-
	기타(자료제출 등)	8	8	-	-	-

시정 · 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 메르스 기간 중 해외연수 및 포격 도발시기 중인 비상시기에 직원 휴가실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 당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강해이 행위 엄단, 공직윤리 함양, 비상응소체계 유지 등 ○ 인사발령에 따라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후 국가적 위기 상황시 해외연수 및 휴가 자제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상시 복무관리 철저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조치
<p>2.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됨에도 행정자치부 공무원이 감사직에 등재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권의 확립을 위해 중앙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조직구성에 관한 관련 기준을 정비하기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감사 참여를 통해 연구원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기본법 개정('15.5월) : 감사 1명 → 2명 - 연구원 정관 개정('15.12월) : 행자부 단독(1명) → 행자부·지자체 각 1명 ○ 지자체 감사 선임('16.2월 이사회) : 서울시 재무국장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감사로서 실질적 감사 등 활동 개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 지방세연구원의 연구목적 해외 연수 이후, 연수 성과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음. 연수의 최종 목표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물임. 조속히 연수 결과물을 생성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바람</p> <p>(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지방세제도 비교연수 통해 유럽 및 일본 주요도시 지방세제도 공유 및 정책교류 ○ 해외 연수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공유 통해 정책 추진에 참고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제 비교활동 등 연수결과를 활용하여 지방세 정책개발 및 운영에 반영 추진
<p>4. 지난 5월, 기관운영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서 계약이 성립된 부동산 취득분에 대하여 추가 부과·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지적되었음.</p> <p>이에 대한 징수가 정당하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고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여 또다시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p> <p>(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정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토지 추가보상금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분에 대하여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마포구청 세무과에서 일제조사 하여 토지 추가보상금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분을 추징완료 하였음 - 추징세액 : 506,580천원 추징완료('15.5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로 과세누락이 발생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5. 메르스가 한참 유행하던 시기 약 20일 동안 발열 증상으로 병가·연가를 낸 직원에 대하여 마땅히 직원 감염우려 및 직장 폐쇄의 경우에 대비해야 했으나 하지 않는 등 재무국 자체의 대응태도에 문제가 있었음. 해이해진 직원들의 근무 기강을 철저히 다져줄 것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5 메르스 사태시 (행자부)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사항, (市) 대응매뉴얼 등에 따라 복무관리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휴가자는 약간의 발열(38℃미만) 외에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감염원에 노출된 바 없어 관리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본인 희망에 의해 휴가를 실시하였음 ○ 메르스 관련 조치사항을 준수하도록 직원들에게 안내('15.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르스 예방수칙 준수, 감염시 긴급조치 후 지체 없이 보고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상황 발생시 초기부터 대응 철저 및 근무기강 확립
<p>6. 지난 8월 24~27일은 북한 목함 지뢰 사건이 있었던 시기임. 소속 공무원 비상근무 관련 휴가·출장·교육자 현황을 보니 이러한 비상 대기 시기에 국장 비롯 30명의 직원이 휴가를 떠났음. 근무 기강 재점검 해줄 것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 당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강해이 행위 엄단, 공직윤리 함양, 비상응소체계 유지 등 ○ 인사발령에 따라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후 국가적 위기 상황시 휴가·출장·교육 자제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상시 복무관리 철저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조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7. 지방세연구원 원장은 전관예우, 낙하산 인사로 평가되는 등 세간의 인식이 좋지 않음. 지방자치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문 절차를 거치는 등의 지방세연구원 임명절차를 개선할 것 (세제과, 지방세연구원)</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주체인 지자체에 연구원장 추천권 부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자부 및 지방세연구원에 건의('16.9.9) - 지방세정협의회 대정부 건의 안건으로 채택('16.10.18)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세연구원 및 행자부에 건의예정
<p>8. 유지보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가 유지보수를 수의계약으로 전담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전문성이라는 이유로 원가에 대한 내역의 파악이 어려움으로 서울형 품셈에 정보화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할 것 (계약심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 관련 원가산정 가이드라인은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에서 구체적으로 마련·운영되고 있어, 우리시도 이를 적용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지방계약법 및 관련 예규·고시 - 개발(응용)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요율제 유지관리비' 방식으로 산정하며, - 이에 따른 산정절차, 방법, 적용사례, 작성양식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아래의 규정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국제표준기반 기능점수 산정 안내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정보화사업 유지관리분야 예산타당성 심사계획(정보기획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서 대상 정보화 관련 적용기준 교육 실시(연 2회) ○ 계약심사시 관련 기준 적합여부 심사 강화(연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9. 고액체납자 공개기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남 3구의 체납액이 가장 많으며, 장기 체납자가 지역에서 유지로 활동하는 등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강화 건의 : '15.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단공개 대상자의 체납 기준금액을 낮추어(3천만원 →1천만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관리 가능 ○ 지방세기본법 개정 : '15.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부터 적용 <p><input type="checkbox"/> 향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체납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음 ○ 특히, 호화 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 등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동산압류, 출국금지 등을 강화하는 등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p>10.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경우 서울시 및 지자체에서 출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통제는 행자부에 의한 국가통제를 받고 있으며 인건비가 전체 지출액 중 4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함에도 남은 출연금으로 적립금을 쌓고 있는 등 세입이 세출보다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 출연 규모를 감소시키거나 출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연구원 출연 규모 인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규모·기준 등에 대해 행자부에 개선 건의('16.9.9.) - 지방세정협의회 안건으로 채택, 타시도와 공동대응 추진('16.1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 → 0.01%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협의회 통해 행자부에 건의, 개선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1. 서울의료원 매각관련 세외 수입이 2년 연속 결손이 발생하고 있음. 매각을 할 때에 처음부터 용적률이나 여러 조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함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도에 매각하려던 서울의료원 재산은 서울시 도시계획 및 재정추진 등에서의 여건변화가 발생하여 매각시기가 '15년으로 조정되었으며 ○ '15년에는 동부지의 종 상향(2종→준주거)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매각 예정가격에 토지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8~9월 2회에 걸쳐 공개매각을 진행하였으나 유찰됨 ○ 현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산의 성공적 매각을 위해 매수자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입찰 참여자를 확대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16.9.8)하고 분할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분할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16년 하반기에 공개 매각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p>12. 상품권을 구입했다는 것은 곧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임. 예산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독립적인 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운용되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또한 대량구매를 하면서도 전체 수량의 20% 밖에 할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임. 명확한 규정의 수립과 관리를 통해 상품권의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수립 및 시행('15.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원 이상 구매시 비교견적 의무화 - 구매·배부대장 작성 및 수령인 자필서명 의무화 - 익년도 2월말까지 전년도 구매·지급내역 공개 ○ 분청 연간단가계약 체결 및 시행('1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만원권 액면가 단가금액 : 9,220원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전년도 부서별 상품권의 구매·지급내역 ('15.10.1~12.31) 공개('16.2.28)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경비 집행내역 회계 검사(매년 1회)시 상품권 구매 및 사용·관리의 적정성 여부 점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3. 최근 5년간 지난년도 시세의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세목별로 살펴보면 징수율이 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경우도 있는 등 징수율 개선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p> <p>직접징수제도의 도입과 같은 징수율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사항을 보고할 것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고액 체납시세에 대한 시 직접 징수 추진 : '01.8월 ○ '15년 체납징수 및 강제집행 등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실적 : 1,797억원(목표대비 98.5%) ※ '14년 대비 25억원 초과징수 - 강제집행 및 행정제재 실적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건, 명)</p> <table border="1" data-bbox="619 712 1449 943"> <thead> <tr> <th>구 분</th> <th>가택수색 및 동산압류</th> <th>고 발</th> <th>출국금지</th> </tr> </thead> <tbody> <tr> <td>2015년</td> <td>181</td> <td>120</td> <td>514</td> </tr> <tr> <td>2014년</td> <td>50</td> <td>17</td> <td>138</td> </tr> <tr> <td>증 감</td> <td>131</td> <td>103</td> <td>376</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 수립 시행 : '16.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목표 : 2,252억원(전년대비 427억원 상향) ※ '15년 목표(1,825억원) 대비 23.4% 상향 조정 - '16년 6월말 징수실적 : 1,647억원(진도율 73.1% 달성) ○ '16년 징수기법 연구 및 전파 : '16. 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연구동아리 운영으로 직원들 징수 전문성 제고 : 매월 - 총 14개 기관(국세청·대검찰청·관세청 등) 채권실무 및 정보공유 협의회 개최 : '16. 7. 1. ○ '16년 신규징수기법 도입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체납자 임차보증금 조사 및 압류 : '16. 8월~9월 - PG(인터넷상거래)매출채권 조사 및 압류 : '16. 6월 ○ 과년도 체납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 '16. 5~6월 ○ 자치구 체납징수실태 지도점검 추진 : '16. 5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체납관리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체납시세에 대한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시세입 100% 목표 달성 ○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 호화 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 등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출국금지 등을 강화하는 등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구 분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고 발	출국금지	2015년	181	120	514	2014년	50	17	138	증 감	131	103	376
구 분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고 발	출국금지														
2015년	181	120	514														
2014년	50	17	138														
증 감	131	103	376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4. 한국 지방세연구원 서울시 파견 인력에 대한 수당지급에 문제가 있음. 초과근무 등에 의해 받는 수당이 너무 과도하며 도덕적 해이, 근태 부실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관리 및 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할 것</p> <p>(세제과, 지방세연구원)</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부터 출입관리시스템 지문 인식을 통해 근태관리 ○ 지방세무 현장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부여 및 지자체 지원업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부터 연구과제 직접 수행 및 지원 - '16년부터 자치단체 협력·지원 관련업무 추가부여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공무원 복무관리 강화를 통해 서울시와 연구원간 유기적 업무협력 제고 																
<p>15.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고 현격히 떨어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p> <p>(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고액 체납시세에 대한 시 직접 징수 추진 : '01.8월 ○ '15년 체납징수 및 강제집행 등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실적 : 1,797억원(목표대비 98.5%) ※ '14년 대비 25억원 초과징수 - 강제집행 및 행정제재 실적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건, 명)</p> <table border="1" data-bbox="619 1357 1444 1585"> <thead> <tr> <th>구 분</th> <th>가택수색 및 동산압류</th> <th>고 발</th> <th>출국금지</th> </tr> </thead> <tbody> <tr> <td>2015년</td> <td>181</td> <td>120</td> <td>514</td> </tr> <tr> <td>2014년</td> <td>50</td> <td>17</td> <td>138</td> </tr> <tr> <td>증 감</td> <td>131</td> <td>103</td> <td>376</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 수립 시행 : '16.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목표 : 2,252억원(전년대비 427억원 상향) ※ '15년 목표(1,825억원) 대비 23.4% 상향 조정 - '16년 6월말 징수실적 : 1,647억원(진도율 73.1% 달성) ○ '16년 징수기법 연구 및 전파 : '16. 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연구동아리 운영으로 직원들 징수 전문성 제고 : 매월 - 총 14개 기관(국세청·대검찰청·관세청 등) 채권실무 및 정보공유 협의회 개최 : '16. 7. 1. 	구 분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고 발	출국금지	2015년	181	120	514	2014년	50	17	138	증 감	131	103	376
구 분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고 발	출국금지														
2015년	181	120	514														
2014년	50	17	138														
증 감	131	103	376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신규징수기법 도입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체납자 임차보증금 조사 및 압류 : '16. 8월~9월 - PG(인터넷상거래)매출채권 조사 및 압류 : '16. 6월 ○ 과년도 체납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 '16. 5~6월 ○ 자치구 체납징수실태 지도점검 추진 : '16. 5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체납관리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체납시세에 대한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시세입 100% 목표 달성 ○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 호화 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 등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출국금지 등을 강화하는 등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p>16. 해마다 관허사업제한 건들이 들쭉날쭉하는 이유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임. 관허사업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과 매뉴얼을 자치구에 시달하고 개선방향을 의회에 보고 바람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 통보(자치구) : '15.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허사업제한의 기준·방법·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하반기 시세 체납징수 중점추진계획 통보(자치구) : '15.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허사업제한 요구자 제출(자치구→시) ○ '15년 하반기 관허사업제한 요구 : '15.11월 ○ '15년 관허사업제한 실적 : 6,24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4,070건) 대비 53.4% 증가 ○ '16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 수립 시행 : '16.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목표 : 2,252억원(전년대비 427억원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목표(1,825억원) 대비 23.4% 상향 조정 ○ '16년 9월 관허사업제한 실적 : 1,989건, 66억원징수 ○ 시·자치구 합동 관허사업제한 추진 : '16.10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자치구 체납징수 공무원 직무교육 : '16.11월~12월 ○ 지방세 체납자중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허가 등을 제한하거나 기존 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 제한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징수실적 제고에 노력하겠음
<p>17. 지방세연구원을 행자부가 감사·감독 한다는 게 문제가 있고 감사를 행자부직원이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행자부 직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시정 바람 (세제과)</p>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감사 참여 통해 연구원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기본법 개정('15.5월) : 감사 1명 → 2명 - 연구원 정관 개정('15.12월) : 행자부 단독(1명) → 행자부·지자체 각 1명 ○ 지자체 감사 선임('16.2월) : 서울시 재무국장(임기: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상반기 서면 감사실시('16.8월)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감사로서 실질적 감사 등 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하반기 감사실시('16.12), 종합감사 실시('17.6)
<p>18. 행정재산관리 현황을 오류로 작성된 것이 많아 행정재산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임. 오류가 없도록 작성하고 행정재산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시 의원이 알 수 있게 표시바람 (자산관리과)</p>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재산관리 현황 제출 자료는 대부분 재산 현황목록 및 임대료 부과현황 등으로, 각 재산관리관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자산관리과에서 전체자료를 조사하여 제출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재산 관리 현황 작성 시, 각 재산관리관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오류사항이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여, 보다 정확하고 자료과약이 용이하도록 정리 한 후 행정재산목록 등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9. 전두환 전대통령의 지방세 양도 소득분이 체납되었음. 사회 지도층에 대한 체납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을 세우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징수 하길 바람</p> <p>(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두환 전대통령 체납현황 및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액 : 536,459,950원 - 조치사항 : 압류대상 재산이 없어 아들(전재용)과 대리인(변호사) 면담을 통해 납부 독려 중 ※ 법률자문 : 공무원범죄몰수법에 의거 직접 압류처분 불가 ○ 사회지도층에 대한 특별관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관리대상 : 33명, 249억원 - 징수현황 : '14년 2,315백만원, '15년 2,716백만원 ○ 2016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16.10.17)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두환 전대통령 명의신탁 부동산을 지속 추적하고 있어 발견 즉시 체납처분 등 집행 예정이며 ○ '16년도 체납관리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사회저명인사에 대해서는 직계 존비속에 대한 재산조사, 고발, 출국금지, 가택수색, 보도자료 제공 등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p>20. 출연금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의 엇갈리는 점이 있음. 하지만 법이 우선이기에 법을 우선 준수할 수 있길 바람</p> <p>(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여 '16년도 출연금의 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안을 제출('15.10월) ※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제114조): 지방세연구원 출연 규정 지방재정법(제18조): 출연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 규정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예산 편성 등 필요시 사전에 의회 동의절차 준수 후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1. 2015년도 세입추계는 당초 예산액 대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제도변화에 따른 과학적인 세입추계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예산운용에 정확성을 확보할 것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세입전망과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지방세 세입추계모형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 이후 우리시 추계모형을 기반으로 행자부 시스템이 개발되어 전국 지자체가 사용 중이며, '12.12월 지방세 연구원에서 '중기 지방세수 추계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 세수 추계모형을 보완하여 현재까지 활용 중 ○ 그동안 우리 시 세입추계 모형은 안정적인 성장기에는 비교적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하여 우리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한 바가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이후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예 : 정부 부동산 정책 변경, 외부경제 충격)가 발생한 경우 정확한 세입추계가 어려웠으며, 특히 '15년 예산 대비 징수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 '15년도 추계차이는 정부예산결산과 타 자치단체에 비해 차이가 유사하거나 적었음 ○ 이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주택분 취득세 결정요인과 전망(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에 관한 연구과제”를 실시하였고, '16년부터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세입추계에 활용 예정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정책 등에 따른 취득세의 세입 변동성과 경제성장률이 지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등을 연구하여 향후 보다 더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음
<p>22. 구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대해 2회나 유찰되어 감정 평가수수료 6억 2,300만원을 낭비한 사례를 지침으로 삼아 향후 매각에 철저를 기할 것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산을 성공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매수자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입찰 참여자를 확대하고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16.9.8)하고 분할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료원을 올해 매각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재 감정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음 ※ 감정평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1년간 유효('16.7.10까지)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3. 시유재산위탁관리 업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캡코에서 SH 공사로 변경했음. 서울시 시비에서 나가는 예산이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재산 관리에 전문화되고 특별한 관리 능력을 가진 업체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봄.</p> <p>SH 공사는 자산관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도 위탁업체 선정 이후 SH 공사의 차별화된 관리 계획서도 없음.</p> <p>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캡코보다도 더 나은 관리 능력을 보여야 할 것임. 시유재산 관리 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는 공유재산위탁관리 업체 선정 시,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9조 제2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 추천 등으로 「서울시 공유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5.21 위원회 개최 / 심사위원 20명(내부 6명, 외부 14명) ○ 프레젠테이션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관리 수탁 '선정' 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위탁기간 / 위탁재산 : '15.7.1~'18.6.30(3년) / 1,086필지 <p>※ SH공사의 위탁관리 추진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 보강(2명→4명) 및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실시 ○ 위탁관리 추진실적 비교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data-bbox="603 1099 1449 1417"> <thead> <tr> <th>구 분</th> <th>자산관리공사(A) (‘14.07.~’15.06.)</th> <th>서울주택도시공사(B) (‘15.07.~’16.06.)</th> <th>차 액 (C=B-A)</th> <th>증감율 (D=C/A)</th> </tr> <tr> <td></td> <th>금 액</th> <th>금 액</th> <th>금 액</th> <td></td>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7,591,240</td> <td>18,838,797</td> <td>11,247,557</td> <td>148%</td> </tr> <tr> <td>매 각</td> <td>6,010,602</td> <td>8,250,671</td> <td>2,240,069</td> <td>37%</td> </tr> <tr> <td>대 부 료</td> <td>1,173,135</td> <td>10,329,063</td> <td>9,155,928</td> <td>780%</td> </tr> <tr> <td>변 상 금</td> <td>212,964</td> <td>198,194</td> <td>△14,770</td> <td>△7%</td> </tr> <tr> <td>예금이자 등</td> <td>194,539</td> <td>60,869</td> <td>△133,670</td> <td>△69%</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년도 관리실적 점검 및 정산 : '16. 10월 ○ 정밀실태조사 후속조치 시행(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자료 업데이트, 변상금 부과, 매입권유를 통한 매각 등 	구 분	자산관리공사(A) (‘14.07.~’15.06.)	서울주택도시공사(B) (‘15.07.~’16.06.)	차 액 (C=B-A)	증감율 (D=C/A)		금 액	금 액	금 액		합 계	7,591,240	18,838,797	11,247,557	148%	매 각	6,010,602	8,250,671	2,240,069	37%	대 부 료	1,173,135	10,329,063	9,155,928	780%	변 상 금	212,964	198,194	△14,770	△7%	예금이자 등	194,539	60,869	△133,670	△69%
구 분	자산관리공사(A) (‘14.07.~’15.06.)	서울주택도시공사(B) (‘15.07.~’16.06.)	차 액 (C=B-A)	증감율 (D=C/A)																																
	금 액	금 액	금 액																																	
합 계	7,591,240	18,838,797	11,247,557	148%																																
매 각	6,010,602	8,250,671	2,240,069	37%																																
대 부 료	1,173,135	10,329,063	9,155,928	780%																																
변 상 금	212,964	198,194	△14,770	△7%																																
예금이자 등	194,539	60,869	△133,670	△69%																																

건의사항

건의사항	조치결과
<p>1. 메르스 사태 당시, 재무국 4급 공무원을 포함한 지방세 연구원 연구원들이 유럽으로 벤치마킹 연수를 강행한 적이 있음. 국가위기 사태 시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해외 출장을 강행한 것은 온당치 않음. 향후, 국민정서와 시기를 고려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연수가 진행되도록 신중한 연수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p> <p>(세제과, 지방세연구원)</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재난시 해외연수를 자제하고 업무연관성 뿐만 아니라 국내외 사정 등 주변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 ○ 외국 지방세제도 비교연수 개선 시행을 통해 연수의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추진 성과를 반영하여 연수 대상자를 선정 - 지방세 선진도시 대상으로 일정 및 국가를 조정, 연수의 내실 강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에도 업무 연관성 및 국가·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연수계획 수립하겠음
<p>2. 자치구별 청소행정에 관한 계약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15년에서 20년까지 독점적으로 체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거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p> <p>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확한 원가조사를 해서 공정경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p> <p>(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 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시 영업구역은 당해 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의 전지역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의해 청소대행업체를 자치구청장이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였으나, 관련 조항이 삭제('15.1.2)됨으로써 경쟁계약이 가능하게 됨 ○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체계 개선계획」(시장방침 제281호) 을 수립·시행 및 공개경쟁입찰 표준안 등이 포함된 “종량제 수수료 가이드라인” 자치구 송부 ('14.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1월 4개구에서 공개경쟁으로 업체 선정

건의사항	조치결과
<p>3. 우리은행이 운영노하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서울시의 재정시스템이 한 은행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소프트웨어 운영기법, 유지방법에 대해 일반 시중은행이 참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금에 한해서라도 은행을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시금고인 우리은행과 약정기간 4년('15.1.1~'18.12.31) 동안 단수금고로 운영토록 약정 체결('14.4.24) ○ 차기 시금고 선정시('18년) 사전에 금융 관련 교수,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 기금에 대한 별도 금고 지정 여부를 포함하여 우리시에 보다 유리하고 합리적인 시금고 운영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임
<p>4. 메르스 기간에 다중 이용 시설과 관련된 모든 행사에 대해 취소지침이 내려왔음에도 재무국 공무원이 지방세연구원과 같이 해외 시찰을 다녀온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임. 또한 국외여행 분담금의 경우 매년 기준이 다르고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집행되고 있음. 국외여행시 주변여건에 대한 고려와 신중한 계획 검토를 통해 행정연수에 꼭 필요한 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국 간부회의 실시 및 국외여행 관련 주의 당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재난시 해외여행 및 출장 등 자제, 비상응소체계 유지 등 공직기강 확립 당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국가적 위기 상황시 해외연수 및 휴가 자제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 ○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시 업무연관성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 분위기 등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실시여부 신중히 판단

건의사항	조치결과
<p>5. 서울의료원 자산 매각 실패가 서울시 재정확충에도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으며 사장되는 자산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을 인식하고, 앞으로 의료원 매각 관련 등 재산을 가장 적절하게 매각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대처하고 서울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바람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우리시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산을 성공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매수자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입찰 참여자를 확대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16.9.8)하고 분할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분할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16년 하반기에 공개매각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p>6. 포상금과 관련하여 6, 7급 실무자보다 4급 관리자가 포상금을 더 많이 받아 가는 문제가 있음.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조직문화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부터 포상금 지급에 있어 징수원인별로 징수난이도 및 기여도를 감안하여 성과인정비율을 60%~100%로 차등 지급토록 하였으며, ○ 관리자에 대한 지급규모 역시 6·7급 실무자의 평균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토록 함으로써 관리자가 실무자보다 포상금을 많이 받아갈 수 없도록 제도화 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급 관리자는 최고 지급한도를 팀 직원의 평균을 제한선으로, 4급 관리자는 5급 관리자의 평균을 제한선으로 하여 지급

건의사항	조치결과
<p>7. 지방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소득·소비 과세 중심 레저세 과세대상 확충을 발표하였는데 용산 화상경마장 등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도 필요함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는 사행산업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현행 경마·경륜·경정·전통소싸움에 카지노·체육진흥투표권·복권을 추가 과세하고자 하는 것임 ○ 그간 의원입법과 정부발의안 등으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안이 시도되었으나, 정부 부처간 이견 등으로 무산 ○ 지난 19대 국회에서 조원진 의원 입법발의(14.11.21)로 레저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광지역 주민 등의 반대로 심의 보류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자부 입법 추진시 지원·공조하고 타 지자체와 협력 통해 추진해 나가겠음
<p>8. 담배값 인상에 따른 국고는 늘었지만 지방세는 줄었음. 담배소비세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와 안분 배율을 조정하길 바램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담배가격 인상 추진당시 담배소비세 세율조정(1,007원 →1,372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못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제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매년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대정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 건의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건의사항	조치결과
<p>9.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이 됐지만 서울시의 세무조사권은 없음. 세무 조사권을 가져오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방침을 세워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조사 관련 연구용역 완료('16.8.9. 한국지방세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필요성 및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세무조사 시행 방안 제시 ○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세미나 개최('16.10.17.) ○ 국회방문 지자체의 세무조사 당위성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위 : 박영선 의원('16.9.6.) - 안행위 : 백재현 의원('16.10.20.)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조사권 확보를 위한 서울시와 국회(백재현의원) 공동 세미나 개최 예정('16.11.10.) ○ 중복 조사를 방지하고 기업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일부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보완토록 하겠음
<p>10. 현재 부가세의 11%인 지방소비세가 취득세 영구 인하분 재정보전으로 6%를 올려주어 실질적으로 5%밖에 인상되지 않음. 당초 정부의 약속인 10%의 인상을 가져오기 위해선 전국 지방기관과 의회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목소리 높여 건의하길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12년부터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요청해오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정부약속 미이행분 5% 우선 인상과 복지재원의 안정적 조달위해 20%까지 인상안 주장 - '15.8월 : 행자부에 건의 공문 - '16.9월 : 기획재정부, 행자부에 건의공문 ○ 특히 2015년도부터 자치구와 공동으로 '지방소비세 인상'을 자치분권 확대방안의 핵심과제로 선정·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회·정부·정당 간담회, 재정협의회 등을 통해 수차례 건의 ○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 통해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조속통과 촉구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초안) 제출('16.10.7) ※ 20대 국회에서 지방소비세 확대관련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4건 발의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지방재정 확충의 최우선 과제로 '지방소비세 인상'을 지속 건의 및 촉구

건의사항	조치결과
<p>11.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는 관계 법률 개정에 대하여 과세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지방세 연구원과 국회 등에 공동 대응하는 계획을 세워 철저히 대응할 것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조사 관련 연구용역 완료('16.8.9. 한국지방세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필요성 및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세무조사 시행 방안 제시 ○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세미나 개최('16.10.17.) ○ 국회방문 지자체의 세무조사 당위성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위 : 박영선의원('16.9.6.) - 안행위 : 백재현의원('16.10.20.)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조사권 확보를 위한 서울시와 국회(백재현의원) 공동 세미나 개최 예정('16.11.10.) ○ 중복 조사를 방지하고 기업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일부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보완토록 하겠음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 지방세연구원의 최근 3년간 연구실적 (세제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8)
2. 지방세연구원 연구실적 중 서울시에 반영된 결과 (세제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8)
3. 지방세연구원 해외 벤치마킹 경비 관련 자료 (세제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8)
4. 지방세연구원의 해외 벤치마킹 성과보고서 (세제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8)
5. 위촉 연구원의 계약기간, 급여, 출신학교(전공), 참여한 프로젝트명 및 담당 정규연구원 (세제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0.30)
6.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실적 (재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0)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7.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 가능여부 법제처 질의해석 공문 (재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0)
8. SH공사의 시유재산 위탁관리 추진계획 관련 자료 (자산관리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0)